



의안번호	제 2025 - 17 호
보 고 연 월 일	2025. 6. 23. (제139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 목 차

I. 제168차 전체회의 .....	1
1. 일시·장소 .....	1
2. 참석자 .....	1
3. 주요 안건 .....	1
II. 논의 결과 .....	2
1.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	2
2.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 .....	3
3. 전문위원단 의견 요약 .....	10
4. 추진 일정 .....	11
III. 향후 일정 .....	15

## 【별첨】

송영복, “제10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 검토”  
장유강, 이성화, “10기 양형위원회 설정·수정 범죄군 검토”

# **I. 제168차 전체회의**

## **1. 일시·장소**

- 일시: 2025. 5. 26.(월) 15:30 ~ 18:20
- 장소: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2. 참석자(수석전문위원 1명, 전문위원 11명, 간사 1명)**

- 수석전문위원, 김지건, 김현아, 류경은, 박복순, 송영복, 이성화, 장유강, 최익구, 최준혁, 최호진, 홍진영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운영지원단장(간사)

## **3. 주요 안건**

- 제10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군 등 선정 검토

## II. 논의 결과

### 1.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 가. 자금세탁범죄 ⇨ 견해 일치(포함)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반 범죄는 보이스피싱, 화이트칼라 범죄 등 각종 범죄의 자금 조달 및 범행수익 세탁 용도로 악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범죄임
- 과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요청을 한 바 있고,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판매한 '웰컴투비디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적도 있음
- 발생빈도가 비교적 높고, 2020년~2024년까지 징역형 1,119건이 선고되어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표본의 확보도 충분히 가능함
-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인 경우가 많은데,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절한 적용을 위해서라도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있음 (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에 경합범 관계가 되면 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적용되고, 상한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나.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 ⇨ 견해 일치(포함)

-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를 보호하고, 소방대원 내지 구급대원의 구급·구조활동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양형기준 설정 필요가 있음
- 최근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관한 감경규정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등에 이르게 한 경우가중처벌하도록 하였음에도 발생사건 수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관

심도 높으며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도 있음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과 행위태양 등이 유사하여 양형기준 설정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

## 2.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

### 가.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범죄(징역형 및 벌금형) ⇨ 견해 일치(포함)

- 발생 빈도가 높아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큰 범죄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모두 설정 필요 있으나, 제8기 양형위원회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당시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sup>1)</sup>으로 설정범위에서 제외됨
  -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이 2024. 12. 3. 신설되어 2025. 6. 4. 시행될 예정임. 음주측정 거부의 양형인자, 형량범위 등을 참조하여 규범적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사례군 축적을 위해 후반기에 수정 작업 진행
- 그 외 미설정 교통범죄(사고 후 미조치 등)는 설정 요청이 없고 필요성 높지 않음
-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으로 접근함이 타당

### 나. 중대재해처벌법위반범죄 ⇨ 견해 대립(포함)

#### (1) 제1안(포함, 6인, 다수의견)

- 양형기준 부재로 인한 양형편차가 지적되는 등 양형기준 설정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양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고<sup>2)</sup>,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등을 통한 추가 연구를 거쳐 유사 양형기준을

1) 헌법재판소 2021. 11. 25.자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 결정(기간제한 없이 전범을 이유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한다는 취지) 등

2) 정현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사법정책연구원(2022); 김혜경, “영

참조하면 규범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22. 1. 27. 시행된 후 3년간 32건의 산업재해치사 관련 판례들이 있으므로 기록 검토를 통해 충분히 양형인자를 추출해낼 수 있음
-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이 있는 도급인에 관한 사항 등 위헌 여부가 다투지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함
-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 구성요건의 해석기준에 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정의규정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립된 해석례를 참조할 수도 있음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으로 검토함이 타당함

## (2) 제2안(제외, 4인)

- 2025. 3.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이 있었고, 경영책임자 등 구성요건의 해석기준에 관한 실무상 견해대립도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의 판단을 기다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 축적된 판례나 연구성과가 충분하지 않아 양형인자를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양형기준 수정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보다 많은 사례 축적을 위해서 하반기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다. 디지털 성범죄 ⇨ 견해 일치(포함)

-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여러 기관의 요청이 있는 범죄임
- 법률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법정형 상향을 반영하면서 권고형량범위 및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 반포 등(5년 이하 징역 ➡ 7년 이하 징역), 영리 목

---

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양형요인 분석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하여”,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2호(2022); 김광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 하급심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36권 제3호(2024) 등

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7년 이하 징역 ➡ 3년 이상 유기징역) 등

#### 라. 사행성·게임물범죄 ➡ 견해 일치(포함)

- 변화한 도박범죄의 행위태양(특히 청소년에게 불법도박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사회적 영향력, 범행 결과와 국민의 법감정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법률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법정형 상향을 반영하면서 권고형량범위 및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광진흥법상 무허가 카지노업(5년 이하 징역 ➡ 7년 이하 징역), 경륜·경정법상 유사경륜·경정 등(3년 이하 징역 ➡ 7년 이하 징역), 한국마사회법상 유사경마(5년 이하 징역 ➡ 7년 이하 징역)

#### 마.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견해 일치(포함)

- 대부업법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국회를 통한 국민적 요청과 범죄의 성격(서민이 직접 노출되는 범죄)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 수정 필요 있음
- 법정형과 행위태양이 유사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었는바, 이를 감안하여 채권추심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도 수정 필요 있음

#### 바. 증권·금융범죄 ➡ 견해 일치(포함)

-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이 2012년 설정,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수정된 바 없음
- 자본시장법의 법률개정(2018. 3. 27.자)으로 시세조종 등의 법정형이 상향되었고(10년 이하 징역 ➡ 1년 이상 유기징역), 법률개정(2021. 1. 5. 자)으로 공매도 방법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 있음
- 양형기준 준수율도 최근 5년간 평균 73.2%로 상당히 낮으므로 그 원



인을 분석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재설정할 필요 있음

- 실무상 문제가 많이 되고, 언론보도도 자주 이루어지는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 양형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양형기준의 수정이 필요함
- 자본시장법위반 범죄는 부당이득액에 따라 법정형이 차등적으로 정해지므로, 부당이득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2024. 1. 19. 시행) 부분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가장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 7. 19. 시행)상 가상자산의 시세조정 등 행위는 사례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고, 필요하다면 기존 증권범죄의 양형기준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 ➡ 견해 대립(포함)

##### (1) 제1안(포함, 10인, 다수의견)

- 그동안 개별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수정하거나 설정할 때 공탁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하여 왔으나, 독립적 과업으로 설정하여 체계적·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성 있음
- 나아가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 또는 그 구상금의 납부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보험금, 대지급금의 지급 또는 그에 관한 구상 의무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도 아울러 검토가 필요함

##### (2) 제2안(제외, 1인)

-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 또는 그 구상금의 납부는 양형기준에 양형인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을 정비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9기 양형위원회에서와 같이 개별 범죄의 양형기준을 수정할 때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를 함께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아. 무고범죄 ⇨ 견해 대립(제외)

(1) 제1안(포함, 5인)

-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처럼 법정형의 중한 정도에 따라 유형을 나누거나, 적어도 양형인자에 법정형이 중한 범죄를 무고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신고를 위축하는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현재 무고죄가 남용될 염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됨
- 무고를 당한 사람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사건화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고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제2안(제외, 6인, 다수의견)

- 무고죄 양형기준의 적용범위는 ①일반 무고(형법 제156조 무고죄,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②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무고의 죄를 범한 경우,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양형기준 시행 이래 각 범죄의 법정형에 변동이 없음
- 무고범죄 양형기준은 제1기 양형위원회 시기인 2009. 4. 24. 의결, 2009. 7. 1. 시행된 이래 그 권고 형량범위가 수정되지 않았으나, 무고범죄 양형기준 준수율(2023년 94.9%)은 전체 범죄군의 평균 준수율(2023년 90.4%)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성범죄 고소 등을 이유로 한 무고범죄 양형기준 강화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양형기준이 법정형을 기초로 설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형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무고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함

## 자. 위증·증거인멸범죄 ⇨ 견해 대립(제외)

### (1) 제1안(포함, 3인)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어 법정증언의 진실성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고, 현행 형사사법제도에서 위증죄 외에 다른 사범방해죄가 없으며, 위증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엄벌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비율이 19%로 낮은 수준이므로 위증범죄의 양형기준을 수정할 필요 있음
- 형량 범위 상향 및 행위태양이나 결과의 심각성을 반영할 수 있는 특별양형인자 추가, 국가적 법익인 점 고려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이라는 일반감경인자 삭제 검토 필요
-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은 측면이 있으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위증죄)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모해위증죄)임에도 현재 1년 이하의 형 선고가 주류인 것은 양형기준이 낮다는 방증으로 보임

### (2) 제2안(제외, 8인, 다수의견)

- 양형기준 준수율(91.2%)이 높고, 위증범죄의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최대 4년 6월까지 형량이 권고되어 법정형 상한(5년 이하 징역)에 근접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응답자의 법감정에도 부합하므로 특별히 수정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양형편차에 대한 비판도 크게 제기되지 않았음
- 위증·증거인멸범죄 1심 사건 수가 2016년에 1,365건이었다가 2021년 428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이후에도 2022년 486건, 2023년 614건에도 불과하여 사건 수가 많지 않음(2024년 사법연감)
- 위증범죄 양형기준의 적용범위는 ①일반 위증(형법 제152조 제1항), ②모해위증(형법 제152조 제2항), ③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위 법 제14조 제1항), ④특허법상 위증(위 법 제227조 제1항), ⑤실용신안법상 위증(위 법 제47조 제1항), ⑥디자인보호법상 위증(위 법 제83조 제1항), ⑦상표법상 위증(위 법 제94조 제1항)이나,

양형기준 시행 이래 위 ⑥, ⑦ 범죄의 벌금형 법정형만 변동이 있었을 뿐, 그 외에 변동이 없었음 → 위증범죄 양형기준 강화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함

-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이 동일한 다른 범죄와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고(예: 업무방해와 기본 同, 감경 더 높고 가중 더 낮음), 다른 범죄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위증·증거인멸범죄는 무고범죄와 성격을 같이 하는 것으로, 무고범죄에 관하여 양형기준 수정을 할 때 함께 수정을 검토함이 타당
- 위증죄의 법정형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을 더 상향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3. 전문위원단 의견 요약

구분	주제		포함 자치 전문위원 /의견 표명 전문위원
설정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		10/10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양형기준 설정		10/10
수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범죄 징역형 및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10/10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	중대재해처벌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6/10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11/11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		11/11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		11/11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		11/11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		10/11
	무고범죄 양형기준 수정		5/11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수정		3/11

#### 4. 추진 일정

가. 제1안(8인, 다수의견)

구분	상반기	하반기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	○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	○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	○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	○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양형기준 설정		○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		○

나. 제2안(3인)

- 제1안과 달리,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을 하반기에,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상반기에 하는 한편, 자금세탁범죄를 하반기에,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를 상반기에 설정하자는 안

※ 참고자료

## 제10기 양형위원회 일정안

[2025. 6. 기준, 전문위원단 다수의견 기준]

전문위원회의	양형위원회의	안건
	25.5.12.(월)	● 출범식
25.5.26.(월)	25.6.23.(월)	● 제10기 설정 및 수정범죄 선정
25.6.30.(월)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25.7.21.(월)	25.8.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li> <li>●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 결과에 따른 각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li> </ul>
25.9.1.(월)	25.9.1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li> <li>●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li> </ul>
25.10.20.(월)	25.11.7.(금)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점유기준) 심의</li> <li>●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심의</li> </ul>
25.12.1.(월)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25.12.8.(월)	26.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점유기준) 심의</li> <li>●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점유기준) 심의</li> <li>● 각 양형기준안 의결</li> </ul>
26.2.27.(월)		공청회
26.3.16.(월)	26.3.3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 심의 및 수정 양형기준 의결</li> <li>●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대하여 제출</li> </ul>

전문위원회의	양형위원회의	안건
		<p>된 의견 심의 및 양형기준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 심의 및 수정 양형기준 의결</li> <li>●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 결과에 따른 각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 심의 및 각 수정 양형기준 의결</li> </ul>
26.4.20.(월)	26.5.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의료·구급·구조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li> <li>●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li> </ul>
26.6.1.(월)	26.6.2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li> <li>●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li> <li>●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li> </ul>
26.6.29.(월)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26.7.20.(월)	26.8.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의료·구급·구조범죄 양형기준 설정안(형량 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li> </ul>
26.9.7.(월)	26.9.2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li> <li>●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li> </ul>
26.10.19.(월)	26.11.6.(금)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li> </ul>
26.12.7.(월)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26.11.30.(월)	27.1.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li> <li>● 각 양형기준안 의결</li> </ul>



전문위원회의	양형위원회의	안건
27.2.19.(금)		공청회
27.3.15.(월)	27.3.2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의료·구급·구조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 심의 및 양형기준 의결</li> <li>●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 심의 및 수정 양형기준 의결</li> <li>●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 심의 및 수정 양형기준 의결</li> <li>●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 심의 검토 및 수정 양형기준 의결</li> <li>●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 심의 및 수정 양형기준 의결</li> </ul>

### Ⅲ. 향후 일정

- 일시: 2025. 7. 21.(월) 오후
- 장소 및 안건: 추후 별도 안내